

제278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2008. 10. 22

 지식경제부

목 차

1. 추진경과	1
2. 선진화방안 주요내용	2
3. 이행현황	3

< 참고 >

1. 공공기관 세부 선진화방안(재정부 발표내용)	4
2. 지식경제부 공공기관 유형별 분류	17

I

추진 경과

- 정부는 총 3차에 걸쳐 선진화계획 발표, 총 108개 대상기관 (전체 314개) 중 **지정부 공공기관은 총 29개**(전체 69개)
 - ① 1차(8.11) :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코트라,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기관 기능재조정
 - ② 2차(8.26) : R&D 관리 및 정보통신진흥기관 등 12개 기관 **통폐합**
 - ③ 3차(10.10) :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 등 13개 에너지 공공기관 (민영화 5, 경쟁도입 1, 기능조정 1, 경영효율화 6)

< 지식경제부 공공기관의 선진화 총괄표(1~3차) >

선진화 방향	공공기관명
• 민영화(5)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매각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 경쟁도입(1)	한국가스공사
• 통합(8)	R&D 관리기관(6→3), 정보통신진흥기관(2→1)
• 기능조정(10)	(핵심업무중심 기능재편)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가스기술공사 (R&D 관리기능 이관)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R&D) (수출지원기능 일원화) KOTRA
• 경영효율화(6)	한국전력 및 화력발전자회사
• 계(29개)	공기업(5), 준정부기관(11), 기타 공공기관(13)

* 한전은 2차(R&D 기능조정) 및 3차(전체 경영효율화) 중복

** 볼드체는 3차 선진화 대상기관

II

선진화방안 주요 내용

	대상기관	선진화 주요내용
1차 (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출자 확대, 민간자본 활용 등 통해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非 핵심업무관련 조직·인력은 감축·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트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를 기능별로 통합 - 국내는 중진공, 해외는 코트라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시험원 	정부출연금의 점진적 폐지,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안전공사 	저압부문 안전관리 대행사업 폐지
2차 (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 R&D 지원기관 10개 	<p>산업, 에너지, 산업기술정책 등 정책목적별 3개기관으로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산업분야 (기획·평가·관리), 에너지분야 (기획·평가·관리), 산업기술 정책 (중장기 계획, 성과분석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 소관 R&D기능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진흥기관 2개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
3차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 화력 발전자회사 	민간위탁 및 자회사 이관, 지점 축소 및 인력 감축, 독립사업부제 확대, 발전경쟁 강화, 소비자선택권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공사 	'10년 중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 경쟁 도입 * 발전용 물량('07년 판매량의 43%)부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난방공사 	'08-'09년 중 상장을 통해 일부 지분 매각 * 공공지분 51% 유지, 현행 요금규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종합에너지 안산도시개발 	즉시 민영화('08년부터 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력기술 	'12년까지 지분 40% 매각('09년 20%, '12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KPS 	'12년까지 지분 20% 매각 ('10년 10%, '12년 10%) * 민간지분 現 20% → 40%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기술공사 	집단에너지 등 5개사업 폐지로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

Ⅲ

선진화방안 이행 추진현황

□ 1 ~ 2차 선진화계획 대상기관

- 기능이관, 자본금 확대, 기관통합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중
 - 1차 선진화대상기관 : 석유공사법 등 6개 법률 개정
 - 2차 선진화대상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8개 법률
- 통합기관의 경우,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세부이행계획 마련 중
 - R&D 지원기관 : '에너지 R&D TF' 구성(08.9.29) 및
'산업 R&D지원기관 선진화 TF' 구성(08.10월)
 - 정보통신진흥기관 설립준비단 출범('08.10.20)
- 기관 폐지를 동반하는 R&D 지원기관 선진화방안은 공개토론회 개최를 거쳐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10.10)에서 최종 확정

□ 1 ~ 3차 선진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 중

- 전반적인 10% 경영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 예산 10% 감축 및 비핵심업무의 민간 위탁 활성화
 - 기능재조정 및 이에 따른 사업조직인력의 조정 등 추진

I

1차 선진화 대상 기관

◇ 여건 변화로 기능·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기관 5개

- 여건 변화를 감안, 고유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
 -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 광물 등 자원개발기능에 중점
 - 출자 확대, 민간자본 활용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 개발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업무관련 조직·인력은 감축·효율화
- 수요 감소, 설립목적 상당부분 달성,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기관은 기능축소, 폐지 또는 이관
 - (전기안전공사) 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 폐지로 민간활성화 도모
 - 저압부문 안전관리 대행사업을 공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
 - (산업기술시험원) 민간부문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축소
 -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중복 수행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를 기능별로 통합
 - 국내 수출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
 - 해외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II

2차 선진화 추진계획안

◇ R&D(10) 및 정보통신(2) 지원기관의 정책목적별 통합

① R&D 관리 전담기관

□ 현황

- 부처별로 각각 R&D사업 기획·평가·집행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설치·운영
- 지경부, 교과부 등 7개 부처, 14개 기관이 업무를 수행 중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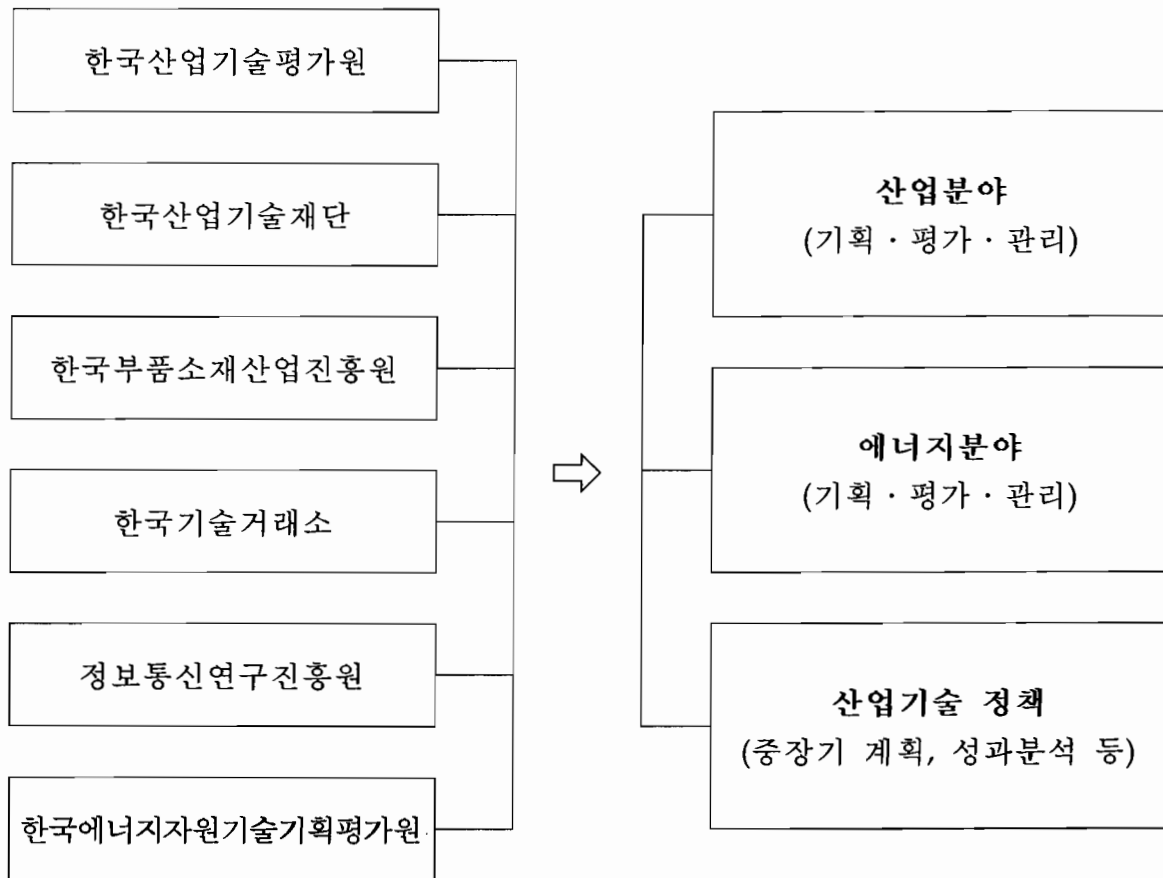
□ 문제점

- 복수 기관이 R&D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건비, 경상 경비 등 간접비용 과다 발생
- 주력산업, 부품소재, IT, 에너지 등 각 분야별로 별도 기관이 R&D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간 연계, 시너지 효과가 미흡
- 기획/평가/집행관리 기능이 분산되어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수요자에게 일관된 서비스 제공 미흡
- * 부품소재기술의 경우 기획은 산업기술재단, 평가는 산업기술평가원, 집행관리는 부품소재진흥원이 각각 수행

□ 통합방안

◇ 정책목적별로 1개 기관으로 통합

【 산업기술 R&D 관리기관 】 : 산업, 에너지, 산업기술정책



- *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R&D관련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4개 기관은 기능을 통합기관에 이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R&D관련업무 이외의 기능은 정보통신진흥 통합기관으로 이관

② 정보통신·컨텐츠 진흥기관

□ 현 황

- 각 부처별로 정보통신 산업육성, 정보보호, 정보화 격차해소, 문화컨텐츠 진흥 등을 위해 정보통신·컨텐츠 진흥기관 설치
- 지경부, 방통위 등 4개 부처, 10개 기관이 업무를 수행 중

【 부처별 정보통신진흥기관 현황 】

지경부(2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방통위(3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문화부(3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행안부(2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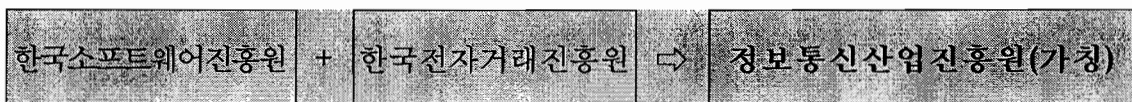
- 과거 다른 부처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이 부처 통합이후에도 각각 공공기관으로 유지
- 민간부문 활성화 등 기관설립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도록 기능 및 정체성 재정립 필요
 - * 전자상거래, 인터넷 진흥 등은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공공기관 역할 축소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중복 등으로 비효율 발생
 - 공통 행정조직·유사한 사업의 중복 수행으로 예산낭비 및 수요자에게 혼란을 초래
 - * 게임, 방송, 영상은 디지털융합 등 정책환경변화로 인해 기관간 통합 필요성 제기

□ 통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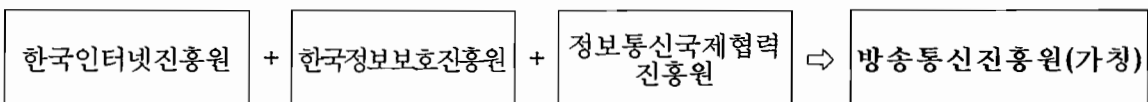
◇ 현행 10개 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통합

○ 부처별 선진화 방안

【 지식경제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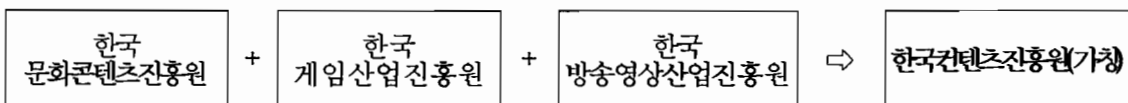


【 방송통신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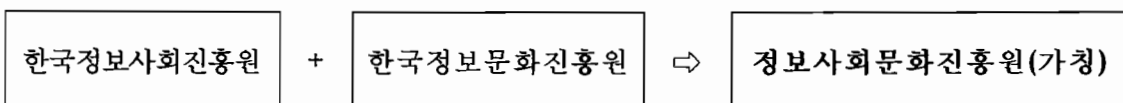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해외마케팅 기능은 지경부소관 KOTRA로 이관(기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



* 통합, 추진방식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

【 행정안전부 】



Ⅲ

3차 선진화 대상기관

◇ 13개 에너지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① 한국전력 및 5개 화력발전자회사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전력은 송·배전, 전력판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3개 전력사가 통합되어 '61년 한국전력(주)로 발족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환으로 발전경쟁의 도입을 위해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발전자회사로 분리 (2001.4.)
- (과도기적 체제의 문제점) 가동률 증가 등 발전경쟁에 따른 효율성 증가가 둔화되고 조직·인력 측면의 비효율성이 증가
 - * 발전사 분리 이후 남동발전 매각실패 등 민영화 추진 중단
- (한전의 실질적 독점체제 유지) 내부거래 및 경영간섭 등으로 발전사 성과제고 유인 미흡
- (획일적 요금체계)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기호가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만족도 저하 및 에너지 절약 유인 미흡

□ 경영효율화 방안

- (한국전력 경영효율화) 유지보수 민간위탁 확대, 자회사 업무이관, 영업인력 감축 및 배전운영인력 효율화

- 설비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확대 및 시스템 개발 업무 등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자회사 이관
- 판매시스템통합(SI) 및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에 따라 지점광역화를 통한 지점 축소 및 영업인력 감축
- 배전자동화 점진적 확대에 따라 배전운영부문의 효율화
- (한전 내부경쟁 강화) 배전·판매의 9사업본부 7지사를 사내 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하여 내부경쟁 강화
 - * 사업부별 재무제표 산출, 예산편성 및 경영·인사재량권 부여 등
- (발전사 경영효율화) 지원 조직 축소 및 인력관리 효율화
 - 처·실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 슬림화
 - 발전사별로 연료의 개별구매와 공동구매의 전략적 운용
 - 토목·건설 인력의 전환배치를 통해 향후 발전소 운영인력 등의 증원 소요 흡수
 - 발전자회사간 발전경쟁 강화 방안 강구
- (소비자선택권제고)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도입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시간대별 요금제 등을 통해 피크타임 수요를 분산하고 에너지 절약과 요금절감 유도
 - * 피크타임 수요 5% 분산시 314만kw 설비 절감이 가능하여 약 1조 9000억원 투자비 절감 가능 (가스복합화력발전 기준)

② 한국가스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83년에 설립되어 천연가스 도입·도매, 생산기지·공급망을 건설·운영 기능 수행
- 천연가스 도입·도매 독점('07년 2,500만톤 수준 도입)
 - '07년 판매량은 2,546만톤으로, 용도별로는 발전용이 43%, 산업용이 20%, 가정용 등 일반용이 37% 수준
- 도시가스요금 중 원료비의 비중이 83% 수준('07년 서울시 기준)으로 요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 천연가스 도입·도매 독점에 따라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음

□ 기능조정 방안

- '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 도입
 -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 확대
- 경쟁 물량은 총 예상수요 중 가스공사 기 계약분을 제외하되, 가스공사 및 신규 판매사업자간 도입경쟁 실시
 - * 경쟁 도입 첫해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물량 보장

③ 한국가스기술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93년에 설립된 가스공사 자회사로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 설비의 정비·보수 기능 수행
 - 국내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 설비 정비·보수 및 저장시설 설계 기능 독점
- 목적외 사업에 투자하는 등 방만경영
 - 민간이 수행중이거나, 설립목적과 무관한 충전소 건설 등 6개 사업 운영

□ 기능조정 방안

- 민간에서 수행 중이고, 설립목적과도 무관한 사업 중단 및 관련 조직·인력 감축을 통해 핵심사업에 역량집중
 - 집단에너지 사업(경기CES-양주고읍지구 열병합발전소) 매각
 - LNG충전소 건설, 공공건설, 조명등 설치,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사업, 지열 에너지 활용 등 5개 사업은 중단

④ 한국지역난방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집단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85년에 설립
 - *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1985)되었다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1991)
 - * 지분구성 : 정부 46.1% / 한전 26.1% / 서울시 14% / 에관공 13.8%
- 집단에너지사업은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
 - '07년말, 에너지기업, 도시가스업자 등 28개 민간 사업자가 참여 중 * 지역난방공사 시장점유율('07년 말) : 60%

□ 민영화방안

- '08~'09년 중 증시 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 매각
 - 지분매각시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 검토
-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향후 신규 사업 참여 제한
 - * '08.6월 현재, 기 허가된 사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지속 추진
- 지역적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 지분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지분 참여 기회 부여 검토

※ 현행 요금규제(민간기업 포함) : 고정비(상한제 적용), 변동비(연료비연동)

⑤ 안산도시개발(주), 인천종합에너지(주)

□ 현황 및 문제점

- 신도시 등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구 분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 설립연도	1995년	2004년
· 공급지역	안산 고잔 신도시	인천 송도 신도시
· 지분구성	지역난방공사(51%), 안산시(42%), 기타(7%)	지역난방공사(50%), 인천시(30%), 삼천리(20%)
· 기 타	안산시 요청에 따라 '96년부터 경영 참여	열원시설 건설 중 ('09.11월 준공 예정)

- 지역난방사업은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
 - * '07년말 현재 에너지기업, 도시가스업자 등 28개 민간 사업자가 참여 중

□ 민영화 방안

- '08년부터 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 추진
 - ※ 현행 요금규제(민간기업 포함) : 고정비(상한제 적용), 변동비(연료비연동)

⑥ 한국전력기술

□ 현황 및 문제점

- '75년에 설립된 한전 자회사로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설계, 발전소 건설사업 관리기능 수행
 - * 지분 구조 : 한전 98%, 한국원자력연구원 2%

- 고유가 등으로 세계 원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원천기술 미확보로 독자적인 해외진출 제약
 - * 원전 부문의 설계 자립도는 원전95% 수준이나 핵심설계 코드 등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 재실시권 미확보로 기술이전을 요하는 해외진출에 제약
 - * 원전건설은 건설비가 수조원으로 국내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한국형 원전 수출시 국부창출 가능

□ 민영화 방안

- 2012년까지 지분 40% 수준 매각
 - '09년 중 상장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20% 수준 매각
 - '12년까지 20% 추가 매각
 - * 민간 경영참여를 통한 핵심기술 조기확보 및 경영투명성 제고

- 나머지 지분은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원전사업 해외진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각 추진

⑦ 한전KPS

□ 현황 및 문제점

- '74년에 설립된 한전 자회사로 발전소 설비, 송변전 시설의 정비 기능 수행
 - '07. 12월 증시상장을 통해 지분 20% 민간 매각
 - * 지분 구조 : 한전 80%, 일반투자자 20%(우리사주 4% 포함)
- 민간의 시장참여 확대가 가능한 분야이나 관계회사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쟁 제약
 - 원전정비 분야 독점, 수·화력정비 분야 약 80% 점유

□ 민영화 방안

- 2012년까지 20%수준 지분매각(민간지분 : 20%→40%)
 - '10년 중 10% 수준 우선 매각 후, '12년까지 10% 추가 매각
 - 발전정비시장 경쟁 확대 지속 추진
- 나머지 지분은 국내 발전정비업체간 유효경쟁여건을 감안하여 매각 추진

참고 2

지정부 공공기관 유형별 분류

구분	기관유형	세부분류기준	대 상 기 관
공 기 업 (6)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이상인 기관 (대통령 임명기관; 단, 광업진흥공사 사장은 장관 임명)		
	시 장 형 (2)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자 체수입액이 총수 입액의 85%이상 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준시장형 (4)	시장형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준 정 부 기 관 (22)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미만인 기관 (장관 임명기관; 단, KOTRA·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대통령 임명)		
	위탁 집행형 (20)	정부 정책사업 을 위탁받아 대 행하는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품질관리원, KOTRA,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 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 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소프트웨어 진흥원,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우정사업 진흥회, 한국우편사업지원단
	기금 관리형 (2)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 탁받은 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타 공공 기관 (4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자체 정관에 의한 중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관장 임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 (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 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기초전력연구원, 안산도시 개발(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 기술거래소,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 파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 략물자관리원,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연구회,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식품연구 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 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 술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별지원본부, 별정우체국연합회, 우정복지협 력회		